
2017년도 업무계획



보고 순서

I . 지난 4년의 성과

II . 정책 추진방향

III . 주요업무 추진계획

1. 국가안보와 법질서 확립
2. 범죄로부터 국민안전 보호
3.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
4. 경제활성화 지원과 미래 대비

I . 지난 4년의 성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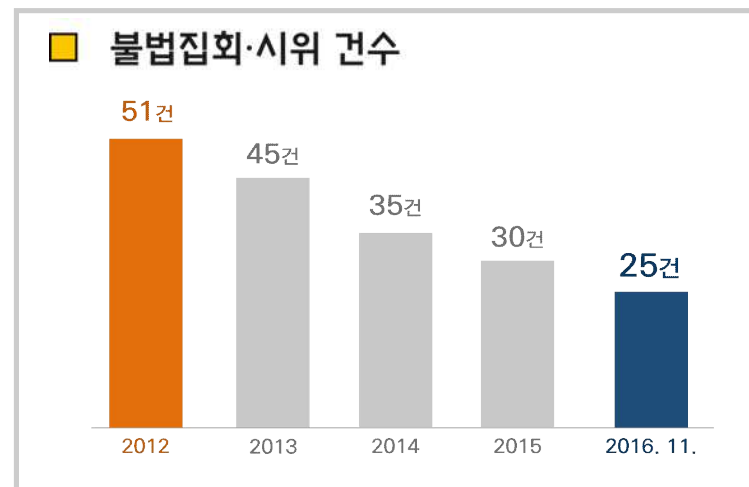
□ 헌법가치 부정세력 엄단

- ‘통합진보당’ 위헌정당 해산결정
 - 소속 국회의원 5명 의원직 상실
- 현역의원 내란선동 사건 중형 선고
 - 주요간부 15명 징역 9년 등 실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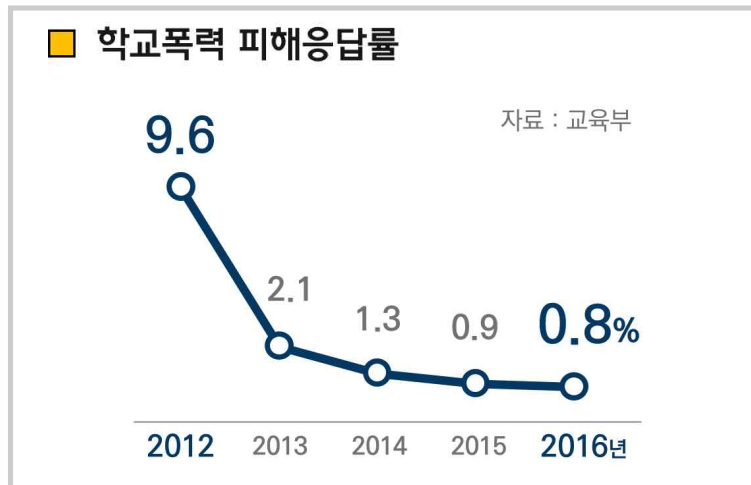
□ 평화적 집회 · 시위문화 정착

- ‘불법시위 삼진아웃제’ 철저 시행
 - 국고손실 등 민사소송 지원 강화
- 불법집회 · 시위 비율 대폭 감소
 - '12년 6.1건(1천건당) → '16년 2.4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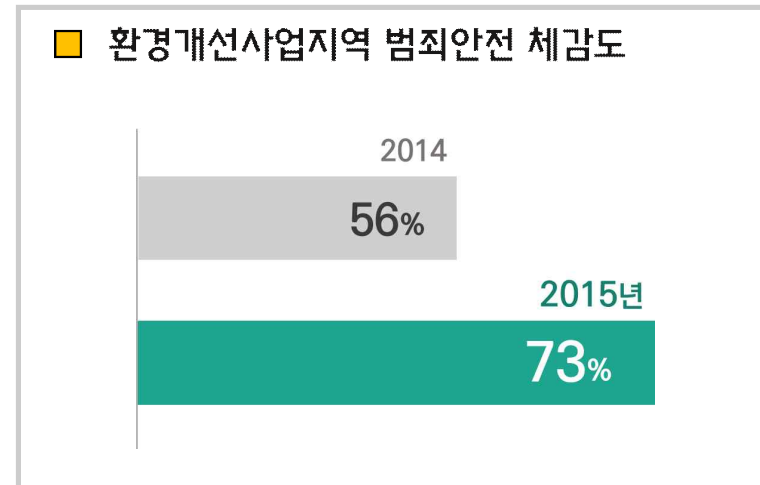
□ 4대 사회악 범죄 엄정 대응

- 여성대상 강력범죄 종합대책 수립
- ‘식품안전 중점검찰청’ 지정·운영
 - 식품안전체감도 '12년 66%→'16년 75%
- 아동학대처벌법 제정·시행('14. 9.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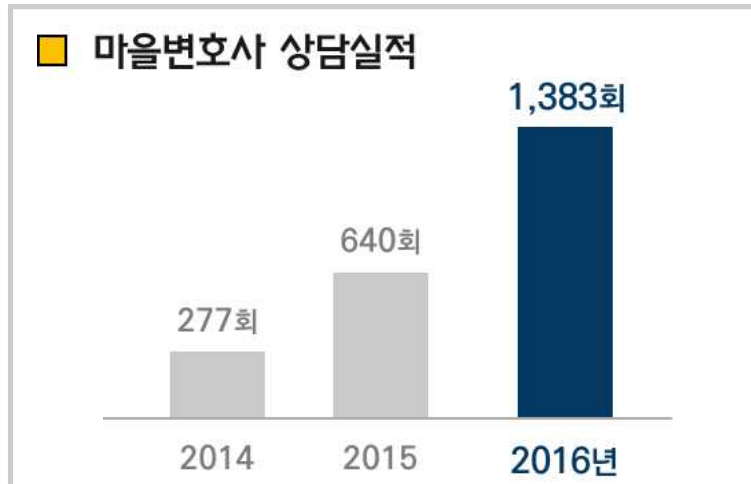
□ 범죄예방 및 피해자지원 강화

- 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(CPTED) 확대
 - '14년 14곳, '15년 11곳, '16년 12곳
- 수형자 집중인성교육('16년 10,071명)
-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('16년 196억원)



□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

- 전국 1,412개 읍·면에 마을변호사 1,450명 배정 ('14. 11.)
- 법률홈닥터 증원 (20→40명)
 - 전국 10개 권역별 연계시스템 구축



□ 중소기업·관광산업 지원

-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, 해외 진출 중소기업 대상 법률지원단 운영
- 제주 환승관광 무비자입국 확대 (7곳), 전자비자 발급 등 비자 간소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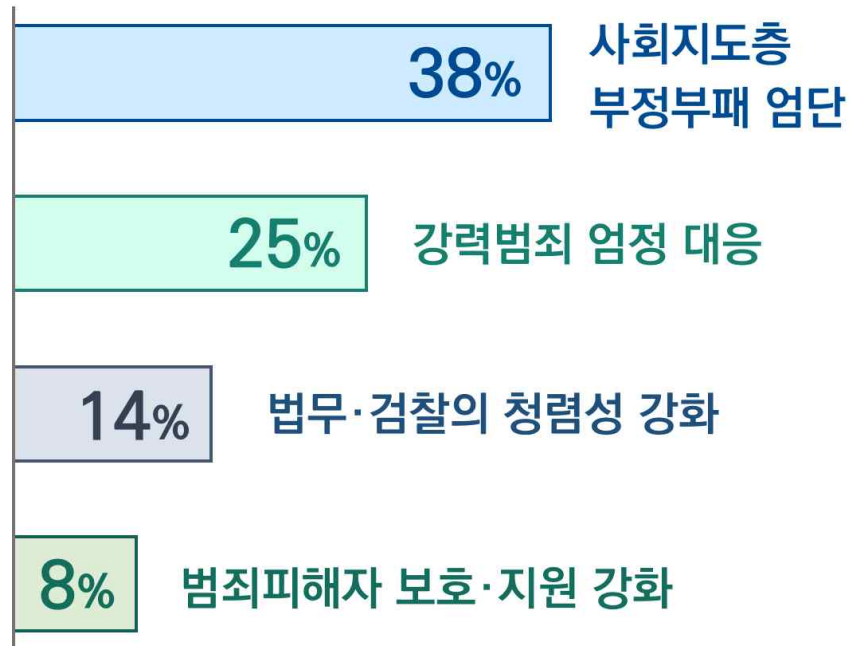
■ 중소기업·벤처기업에 대한 법률지원 실적

구 분	지원실적
9988 중소기업	5,371건
창조경제혁신센터	3,827건
해외진출 중소기업	641건

Ⅱ. 정책 추진방향



'17년 국민이 원하는 법무정책



※ 법무부 홈페이지, SNS 통한 국민 의견 수렴 (총 1,067명)

정책 추진방향

- √ 국가안보와 법질서 확립
- √ 범죄로부터 국민안전 보호
- √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
- √ 경제활성화 지원과 미래 대비



행복한 법치, 믿음의 법치

국민 정책제안 활성화

- 의견수렴 통로 다양화
 - 현장방문 · SNS · 설문조사 등
- 정책 환류체계 활성화
 - 제도개선 결과통보, 사후점검 강화

부처 간 협업 내실화

- 클린피드백 시스템 강화
 - 소관부처와 수사협의 활성화



관련 정책 유기적 결합

- 환경개선사업 · 법교육 · 법질서 실천운동 '법사랑 타운'으로 집중



국민체감도 확산 방안

국민소통 매체 다양화

- 웹드라마 · 웹툰 제작
 -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 등 홍보



Ⅲ. 주요업무 추진계획

1. 국가안보와 법질서 확립

1-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

□ 안보위해세력 근원적 차단

- 간첩·이적단체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부정세력 지속 엄단 및 대응태세 강화
 - 국가보안법위반사범 308명 입건, 92명 구속 ('13년~'16년)
- 악성프로그램 유포, 국가기밀 유출 등 신종 안보위해행위 엄단
 - 사이버 공격 예방·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공조체계 강화

□ 테러 대응능력 강화

- 대테러센터와 정보공유, 「테러방지법」에 따른 유관기관 간 대응시스템 확립
- 테러범 입국을 원천차단하는 '탐승자 사전확인제도' 전면 시행 ('17. 4.)
 - '15. 2. 시범운영 이후 '16년까지 우범승객 등 1,528명 탐승차단

□ 대통령선거 사건의 공정 · 신속한 수사

- 제19대 대선 관련 선거사범 단속체제 적시 전환
 - 일선 검찰청 선거전담반 편성 및 단계별 비상근무체제
- 실시간 수사지휘 시스템 등 유관기관 간 업무협력체제 구축
 - 총선에 전면시행한 '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' 적극 활용 ('16년 9건 긴급통보)

□ 평화적 집회 · 시위문화 정착

- 강화된 '노동 · 집단사범 양형기준'('15. 12. 시행)에 따라 책임에 상응한 처벌
 - 평화 · 합법 집회는 보장하되, '불법시위 삼진아웃제' 등 원칙에 따른 대응 견지
- '디지털 증거자료 지침' 및 '수사핸드북' 활용으로 수사 · 공판능력 강화
 - 디지털 증거 채증요령 등을 일선 검찰청에 전파, 현장 대응능력 제고

□ 법조비리 엄정 대처

- 전국 검찰청 ‘법조비리단속전담반’, 대검 ‘법조비리전담정보수집팀’ 가동
 - 법조·경매 브로커 등 법조비리 사범 10,363명 단속 ('13년~'16년)
- 불법수익 박탈 강화, 법조브로커 명단 공개 등 법조비리 개선방안 추진

□ 공공과 민간의 부패 근절

-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의 부패와 공기업 · 공공인프라 부조리 척결
- 회계부정, 불공정거래 등 기업범죄 및 자본시장교란행위 지속 단속
 - '15. 2. '금융범죄 중점검찰청' 지정 이후 총 1,137명 단속, 323명 구속
- 재정누수 행위 등 신규 국고손실환수 사례 발굴
 - '15. 9. '국고손실환수송무팀' 출범 이후 26건 소제기

□ 생활질서 의식 함양

- 도서벽지에 체험형 법교육 콘텐츠를 갖춘 '찾아가는 로파크' 본격 운영
 - '08년 대전에 이어 '16. 7. 부산에 '솔로몬로파크' 개청, 방문 누적인원 207만명
- 인기 스포츠와 연계한 '배려, 법질서 실천운동' 사업 확대
 - 한국배구연맹 등과 MOU 체결, 공동캠페인 및 선수 대상 법교육

□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

- '18년까지 불법체류율 10% 미만이 되도록 집중단속 ('12년 12.3%→'16년 10.2%)
 - '15년 21.4만명 → '16년 20.9만명 → '17년 20.4만명(계획) → '18년 19.9만명(계획)
 - 광역단속팀 확대('16년 수도권·영남권→'17년 중부권·호남권), 제주도 특별단속지역 지정
- 진정한 난민은 철저히 보호하되, 남용적 난민신청에는 엄정히 대응
 - 허위 난민신청 브로커 집중 단속 및 강력 처벌

2. 범죄로부터 국민안전 보호

2-1 **민생침해 범죄 엄단**

□ 4대 안전 확보

여성안전	밤거리안전위협, 가정폭력, 데이트폭력에 '삼진아웃제' 철저 적용
서민생활안전	보이스피싱, 유사수신, 보험사기, 임금체불, 생활유해물질 엄단
동네안전	범죄취약지역을 집중지원하는 '법사랑 타운' 사업 시범 추진
교통안전	음주·난폭·보복 운전 지속 단속·처벌 강화

□ 4대 사회악 및 아동학대 대응체계 완비

- 학교 밖 청소년 기소유예시 상담·진로교육 프로그램 확대
- 아동학대 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시설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
 - 교사 등 아동학대신고의무자 대상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출장강연 실시

□ 강력범죄 대응역량 강화

- 위치추적 기능을 통합한 '일체형 전자발찌' 개발
 - 피부착자의 재범위험성을 예측하는 '범죄징후 사전예측시스템' 개발 추진
- CCTV 안면인식 및 차량식별 기법 고도화로 강력범죄 추적에 적극 활용
 - '국제 법유전 총회' 개최('17. 8.) 및 DNA 활용 몽타주 추정 기법 도입 추진

□ 정신질환 범죄자 집중 관리

- 적극적인 치료명령 집행('16. 12. 시행)으로 강력범죄 사전 차단
 - 치료감호 만기종료시 보호관찰 부과 추진, 전자발찌 감독업무에 심리전문가 투입
- 고위험군 수형자에 심층 분류심사·심리치료 실시('16. 9. 심리치료과 신설)
 - 서울남부, 진주 등 전국 8개 교정시설에서 정신질환 등 전문 치료프로그램 실시
- 치료감호소 병실 소규모화

□ 사회복귀 지원 내실화

- 수형자 대상 '집중인성교육'에 집단상담 등 참여 위주 교육 강화
 - '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'을 집단행사에서 개별가족 중심으로 개선
- 컴퓨터 프로그래밍, 세탁기능사 등 현장수요를 반영한 직업훈련과정 신설
- 교정시설 신축·이전 추진으로 과밀수용 해소 ('16년 현재 정원 123% 초과)
 - '23년까지 1인당 2.58㎡ 이상 수용면적 확보를 목표로 유관기관 협의 등 종합계획 수립
- 수용자 고령화 대비 혈액투석실 등 의료 시설·인력 확충 (279명→'17년 329명)

□ 소년사법체계 개편

- 교육부 등과 '범정부 소년범죄예방협의체' 구성, 소년비행 예방정책 수립
- '청소년비행예방센터'의 지역사회 범죄예방 허브 기능 강화
 - 스마트폰 중독예방 프로그램 개발, 체험중심 교육시설 조성

3.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

3-1 범죄피해자 보호 · 지원 내실화

□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한 경제적 지원 확대

-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 범위 및 대상 확대 추진
 - 장해구조금 지급범위 확대 (10등급→14등급), 지급대상에 결혼이민자를 포함
- 「범죄피해자보호법」에 ‘가해자 재산 보전제도’ 및 재산조회 근거 보완 추진

□ 범죄피해자 보호체계 강화

- 의정부에 ‘스마일센터’ 추가 설치, 검찰청별 심리치료지원단 설치
 - ‘12년 서울동부·부산 2개소에서 ‘17년 전국 11개소로 스마일센터 확대
- 진술조력인 확대 (‘15년 70명→‘17년 95명), 피해자국선변호사 교육·관리 강화
 - ‘범죄피해자 보호주간’ (매년 11월) 제정 추진

□ 서민생활 법률지원 향상

- 지자체 · 변호사회의 마을변호사 참여 강화로 지역사회 정착 추진
 - '17. 2. 대구경북 지역 MOU 체결('13년~'16년 전북, 경기남부 등 전국 10곳에서 체결)
- 법률홈닥터 대폭 증원 (40→60명),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법률지원 강화
- 마을변호사 · 법률홈닥터 연계 지원체계 마련 ('16. 12. 대구서문시장 화재 지원 79건)
 - 대형재난 · 사고, 다문화가정, 명절 전 임금체불 등 테마별 법률지원

□ 이민자 · 난민 사회통합 강화

- 귀화 · 영주 신청자 등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확대
 - 행자부 · 여가부 등과 협업으로 설치한 '다문화이주민+센터'를 통해 원스탑서비스
- 재정착난민에 대한 취업 · 육아 · 취학 등 맞춤형 지원 추진
 - 1기 미얀마 난민 22명('15. 12.)과 2기 미얀마 난민 34명('16. 11.) 입국, 정착지원

□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법제 정비

민법·형법	기본법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
가사소송법	자녀진술청취 의무화, 절차보조인 도입 등 미성년 자녀 보호
민법(가족법)	자녀 정서 안정을 위한 조부모 면접교섭권 허용 ('17. 6. 시행)
공익신탁	세제 혜택, 기부연금 도입 등 이용도 제고

□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법제 개선

- 저비용·신속 분쟁해결을 위한 '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' 설치·운영
- '17. 5. 서울, 부산 등 전국 6개 법률구조공단에 설치
- 층간소음 분쟁완화, 부당관리비 문제 해소를 위한 「집합건물법」 개정
- 19세 이상 국민 사전등록 없이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('17. 3. 전면 시행)

4. 경제활성화 지원과 미래 대비

4-1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무서비스

□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법률지원 강화

- '17. 6. 중재진흥법 시행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 등 5개년 계획 수립
 - 복합중재센터 건립 추진, 중재원 해외지사(LA, 상해)를 통한 주요국 마케팅 실시
- 스타트업 기업에 경영진단식 법률자문, 도산기업 관리감독기능 개선

□ 동계올림픽 및 관광산업·지역경제 활성화 지원

-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입출국 서비스 편의 확대
 - 신원등록카드 소지자 무비자 입국, 주요인사 입국시 얼굴·지문정보 제공의무 면제
- 동남아 국가 단체 관광객 대상 전자비자 확대 및 수수료 면제
- 농촌일손 돕기 등 '지역주민 친화형 사회봉사명령' 확대

□ 미래대비 법무시스템 개선

- ‘화상공증제도’ 도입, ‘전자증권’ 및 ‘전자문서’ 관련법령 정비
 - ICT 기술 발전에 따른 전자매체의 법적 효력 및 동일성 요건 등 보완
- 법률시장 3단계 개방('17. 3. 미국)을 국내 법률시장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활용
 - 국내외 로펌 합작법인 설립 및 외국법자문사 인가신청에 대한 체계적 관리
- ‘북한인권기록보존소’('16. 10. 개소)의 북한인권기록 DB 개발·구축

□ 고령화 사회 대비 법제 정비

- 유언공증 절차 간소화, 유언대용신탁 과세기준 명확화
 - 부양의무 불이행시 증여재산 반환 등 노인복지 법제 개선
- 각계 전문가 참여 T/F 구성 등 성년후견제도 활성화

□ 검찰 업무의 투명성 · 공정성 제고

- 지방검찰청에 인권 · 감찰 업무를 전담하는 인권감찰관 신설
- 국민 법감정을 반영하여 폭력 등 주요 민생범죄 사건처리기준 재정립
 - '16년 음주교통사고 · 보이스피싱 · 아동학대 등 기준 재정립
- 변호사의 검찰청 출입등록 강화, 선임서 미제출 변론금지, 구두변론대장 작성
- 외부기관 파견검사 점진적 감축 추진으로 검찰 본연의 업무수행 강화

□ 검사 심사 · 평가 시스템 강화

- 검사 적격심사 주기 단축을 위한 「검찰청법」 개정 추진 (7년→5년)
- 검찰 간부 자질 검증을 위한 다면평가 강화 ('16. 11. 재도입)
 - 고검검사급 검사의 리더십 및 청렴성에 대해 하급자가 매년 2회 정기 평가

□ 법무·검찰 내부 청렴성 확보

**다층적 조직을 통한
물샐 틈 없는 감찰 실현**

대검찰청 '특별감찰단'의
고위직 비위 상시 집중감찰

전국적인 감찰 네트워크 구축

- 법무부 감찰관실
- 대검찰청 감찰본부
- 서울고검 감찰부
- 전국 고·지검 감찰전담 검사

**방식 다변화를 통한
감찰기능 획기적 강화**

특임검사식 감찰시스템,
감찰위원회 심의기능 강화

다양한 제보·심사·조사방식 활용

- 익명제보 등 내부제보체계 활성화
- 승진대상간부 재산형성과정 심층심사
- 암행감찰, 권역별 기동점검반 수시가동
- 특정부서 근무자 주식거래 금지

**강력한 처벌을 통한
비위구성원 퇴출**

강화된 징계양정기준의
엄격한 적용

철저한 신분 제재 및 불법수익 박탈

-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 해임·파면
- 징계혐의자 직무정지사유 확대
- 비위 면직 검사 변호사 개업제한
- 불법수익 박탈 위한 징계부가금 제도

**2017년 새해, 법무부는
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‘행복한 법치’,
국민이 공감하는 ‘믿음의 법치’를
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**
